



5·18 암매장 의혹 옛 광주교도소 부지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는 이르면 30일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지 발굴조사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당시 교도소에 주둔했던 3공수여단 지휘관이 작성한 암매장지 약도를 바탕으로 현 테니스장 앞 순찰로 117m 구간(빨간 사각형)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기사 6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 진압 특전사 전투상보 조작·왜곡

3·7·11, 3개 공수여단 마치고 한사람이 쓴 듯 '판박이' 신군부서 제작성한 듯... "오염된 문서 진상규명 한계"

5·18 유혈진압에 투입됐던 특전사와 예하 3·7·11공수여단의 전투상보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3·6면>
5·18 당시 집단발포명령, 헬기사격 명령체계 규명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될 군 문서지만, 마치 '한 사람이 쓰거나, 특정인들의 지휘를 받아 여러 명이 한군데서 작성한 문서처럼 보인다'는 분석이 군 출신 인사, 5·18 연구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실제 1980년대 후반,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측에 "군(軍)이 전투상보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5·18 이후 잇따라 집권에 성공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정권차원 또는 정권실세 주도하에 사실상 5·18 관련 문서 전체

를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과 정보기관 문서 위주의 진상규명 방식이 적절하지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영관급 장교 출신의 인사 A씨는 광주일보에 "특전사, 3·7·11공수여단 전투상보를 분석해보니 한 사람이 작성한 듯 판박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타자기가 흔치 않던 시절에 한결같이 수기가 아닌 타자로 작성됐다는 점, 무엇보다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이 3개 여단, 특전사 전투상보에는 빠져있는 점이 수상하다"고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투상보는 군부대가 작전(전투) 종료 후 전투의 흐름, 공과, 유공자와 유공(공적)내용, 상황도(圖)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상급부대에 올리는 보고서다. 여단급 이상 부대가 작성하며, 한 번 작성돼 상급부대로 보고된 이후에는 상급부대일지라도 예하부대 전투상보 내용에 변화를 주는(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한다.
그런데, 1987년 국회 광주정문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과거사위 등에 제출된 공수부대 전투상보에는 구체적 작전 상황도는 물론 작전의 유공자와 유공내용(공적)이 빠져있는 등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A씨 판단이다.
이와 관련,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평위에서 5·18진상규명 관련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뒷받침하는 제보 전화가 왔었다"고 소개했다.
김 상임이사는 "1987년쯤 군 병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젊은이가 광경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지금 군(軍)에서 병사들을 모아놓고서 5·18작전일지를 다시

작성하고 있다. 조작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며 "시대가 엄혹한 탓에 공론화하거나 문제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꾸려졌던 국방부과거사위원회도 특전사(공수부대) 전투상보 등 군 자료가 상당부분 조작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작에 가담했던 인물(511분석반과 511위원회)에 대한 면담도 진행했지만 종합 보고서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랜 기간 5·18을 연구해온 한 학자는 "전두환, 노태우씨 집권기간만 10년이다. 진상규명 열의와 시대적 목소리는 심분 공감하지만 현재 연구자들이 손에 쥘, 언론인들에게 넘어간 전투상보 등 군 관련 자료 상당수는 왜곡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민의당 중도통합론 파열음

박지원·정동영 탈당 시사
안대표 "국감후 논의" 후퇴
바른당 유승민 의원 선긋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부수로 던졌던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론'이 힘을 받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분당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반발이 점차 격해지고 있다. 여기에 '잠재적 파트너'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까지 통합론에 거리를 두면서 안팎으로 벽에 부딪히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 안 대표는 중도통합론에 대해 국감 이후 논의할 사항이라며 직접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호남 의원들의 반발 강도는 더 강해지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는 23일 CBS 라디오에 출연, 최소한의 소통 등 전략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되지 않은 정체성 변경은 분당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천정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중도 성향이었던 주승용·박주선 의원도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정치적 현실에 맞지 않고 별다른 전략도 없는 통합론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나타

냈다.
통합론에 대한 반발과 함께 당 혁신기구인 제2장당위원회가 내놓은 지역위원장 일괄사퇴 권고 문제 역시 안 대표를 흔드는 뇌관이다. 천성파에서는 "120명의 위원장이 이미 사퇴결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전남 원외 지역위원장은 국회에서 별도 간담회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처럼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안 대표 측에서는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안 대표 측은 "통합 여부는 국감 이후 논의를 해볼 것"이라는 원칙을 되풀이하면서, 여전히 통합 찬성파가 다수라는 주장을 펴며 대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다. 또 안 대표는 이날부터 전·현직 지도부, 중진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전열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개혁신구 중심 통합" 발언에 대해 안 대표를 이날 기자들을 만나 "내부용 메시지로 알고 있다"며 통합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국감 이후 통합론이 다시 논의됐지만 호남 민심이 통합을 수용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진전을 보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안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내부 갈등이 고조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은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前의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홍종학(58) 전 의원을 지명했다. 박성진 전 중소기업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자진사퇴한 지 38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홍 후보자는 인천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일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당 정책위 수석부장과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내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서 재벌개혁위원장과 경제정의연구

소장을 맡으며 경제 산업 분야의 진보적 담론을 이끌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서 문 대통령의 공약 수업을 주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주민이 대한민국의입니다!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5th Korea Local Autonomy Exposition

2017. 10. 26.(목) ~ 29.(일) 여수세계박람회장

관람시간 10:00 ~ 17:00

www.facebook.com/2017klae.org | www.instagram.com/5th_2017klae_org | www.2017klae.org

박람회 문의처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사무국 ☎ 061-665-6614 ✉ im0ahhh@naver.com

기념행사

-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기념사, 유공자 포상 등)
-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 개막식
- 주요 귀빈 오찬 간담회

기념행사

- 지방자치 정책홍보관(자치분권, 주소정책 등)
- 시·도, 지방4대협의체 정책홍보관
- 왕토자원/마을기업 상품 전시·판매관
-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전시(주민자치박람회)

정책세미나 개최

- 지방자치발전 정책세미나(기조강연, 발제, 종합토론 등)

우수사례 발표

- 지자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발표
-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 등

주민참여마당

- 우리마을 사진전, 지방자치 도전 골든벨, 견학프로그램(여수투어) 등

부대행사

- 공연/체험행사, 먹거리 장터 운영 등

주관 행정안전부 | 주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후원 전국시·도·자치단체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민회연합회